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천안함 · 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손 광 주*

-
- I. 문제의 인식
 - II. ‘천안함 논란’의 전개와 국민의식의 변화
 - 1. 민간합동조사단의 발표
 - 2. 여론조사의 변동
 - 3. 천안함 폭침 1주기~3주기 국민의식 변화
 - III. 결론: 세 가지 특징
 - IV. 대책
-

I. 문제의 인식

이 논문은 2014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4주년을 기해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국민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불신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탐색해보며,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2010년 3월 26일 해군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폭침, 장병 46명이 전사하였다. 8개월 후인 11월 23일 북한군은 서해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을 포격하

* 동아일보 기자,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데일리NK 편집국장/편집인,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황장엽 선생 연구비서(11년6개월). (현재)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연구위원, 저서 『김정일 리포트』외.

였다. 이 포격 도발로 해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대규모 군사공격이었다.

심각한 문제는 이후 우리사회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2010년 5월 20일 정부의 천안함 폭침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는 직후 동아일보의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2.0%는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답변한 반면, 21.3%는 “북한 소행이라는 합조단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0대 응답자는 절반 가까운 47.8%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30대는 24.5%, 40대 18.2%였다.

정부가 개성공단 제외 남북경협 전면중단을 담은 ‘5.24 조치’ 발표 직후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70.1%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24.0%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4.4%, “신뢰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45.7%였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은 16.6%,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였다. 모름·무응답은 5.9%였다. 다시 말해, 정부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국민은 4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같은 “신뢰하지 않는다” 추세는 계속 이어져, 정부 발표 3개월 여 지난 9월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이 10명 중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6.4%)”와 “신뢰하는 편(26.1%)”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0.7%)”, “신뢰하지 않는 편(25%)”이라고 답한 사람은 35.7%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한다는 “반반(31.7%)”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2010년 7월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갤럽)를 통해 진행되었고, 표본오차는 $\pm 2.8\%$, 신뢰수준은 95%이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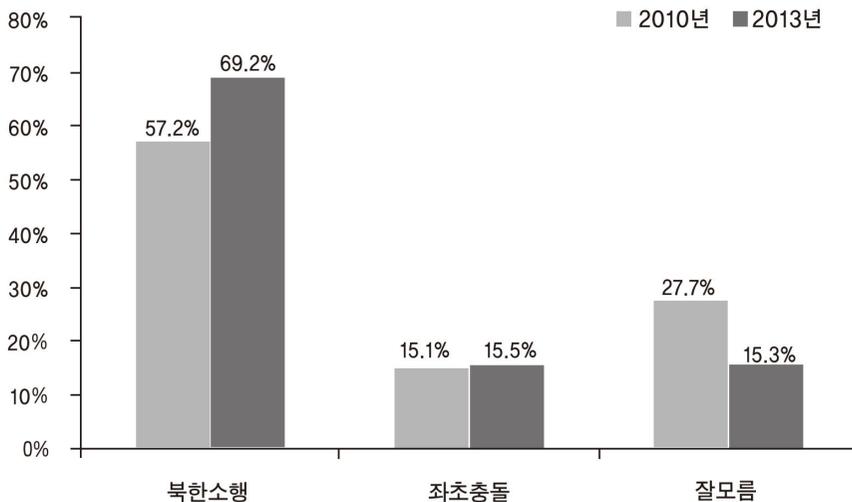
당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관계자는 “연령·정치 성향·지역 등 다른 변수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3~4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²⁾고 말했다.

1) 박명규 외, 『2010 통일의식조사』, pp.232-23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0), <http://tongil.snu.ac.kr/xs/sub710/12885>(검색일: 2014. 3. 13.).

다시 말해, 천안함 사건의 실제 원인 자체보다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2010년 6월 안전행정부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와 중·고교생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서는 성인의 75.4%, 청소년의 75.1%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3개월 가까이 지나 조사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이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0년 5월 20일 이후에도 조사 의뢰기관 및 조사기관에 따라 계속 15%~25% 정도의 편차를 보였다.

천안함 3주기를 맞은 201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월 27일~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소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69.2%로 나타났다. 반면, “좌초나 충돌에 의한 침몰”이라는 의견은 15.5%로 나타났다. (유무선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그림 1〉 리얼미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여론조사’(2014. 3. 27.)

출처: 리얼미터

2) 이석호, “천안함, 정부 조사 믿는다 10명 중 3명”, 『조선일보』, 2010. 9. 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8/2010090800161.html(검색일: 2014. 3. 13.).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82.3%가 북한 소행 의견(좌초, 충돌 5.0%)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50대가 72.9%(좌초, 충돌 9.1%)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40대가 67.4%, 20대가 64.4%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에는 북한소행 의견이 58.7%, 좌초, 충돌 의견이 29.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소행 의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8.0%가 북한소행 의견(좌초, 충돌 4.1%)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도 과반인 56.0%가 북한소행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층은 60.0%가 좌초, 충돌이라는 의견을 나타내, 북한소행 의견(3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며,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 하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견해’나 ‘주장’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표현의 자유’ ‘다양한 견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관계(fact)를 정확히 밝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북한군 사용 어뢰추진체 1번’과 같은 결정적 물증(hard evidence)이 중요한 것이지,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 연령층에 따라, 정치적 지지 성향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한국사회 내부에서 계속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중시하는 다원화 사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일 뿐 어떤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공격인 것도 진실이고, 아닌 것도 진실이라는 모순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때,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대한 이견은 다양성의 발로가 아니라 국민의 분열일 뿐이다. 특히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고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복수(複數)의 ‘사실’이 존재하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³⁾는 견해는,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다시 말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과학의 영역으로써 실제적 진실은 하나인데,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국론은 둘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의 소행임을 믿지 않는 비중이 대략 15%~20% 정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천안함 폭침과

3) 이재교, 「천안함 폭침사건과 거짓 루머」, 『시대정신』2010년 가을호,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1003&num=418> (검색일 2014. 3. 12.).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국민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부 발표를 불신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해보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천안함 논란’의 전개와 국민의식의 변화

1.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

처음부터 군사도발의 주체가 북한이 분명하였던 연평도 포격도발과 달리, 천안함 폭침사건은 발생 초기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진행되었다.

사건발생일인 2010년 3월 26일 밤 KBS TV 11시 뉴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북한의 관련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하였다. 천안함 침몰은 밤 9시 22분 경이었으므로, 사건 발생 1시간 여 지난 시점에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예단한 국방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과 언론의 보도는 신중치 못한 것이었다. 또 당시 천안함 생존자였던 장교는 “내부 폭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 발표와 현장 생존자의 발언이 다른 데 의혹을 가졌던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새떼’로 추정되는 물체가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희미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건발생 초기 과정이 어수선하게 진행되었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침몰한 천안함을 수중에서 관찰한 한주호 준위 등 UDT대원들은 “선체가 매끈하게 잘려졌다”는 증언을 하여,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수중폭발설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월30일 한주호 준위가 선체 인양을 위한 잠수 중 순직하였고, 4월2일 저인망어선 금양 98호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선원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부터 정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던 5월20일까지 어뢰 · 기뢰에 의한 공격설, 내부 폭발설, 좌초설, 피로파괴설, 심지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 미국 잠수함의 공격설 등 여러 루머들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조사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을 한국 측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하였다.

합동조사단은 쌍끌이 어선이 백령도 침몰해역에서 거의 기적적으로 확보한 어뢰추진용 프로펠러, 추진모터, 조종장치 등의 물증을 수거하였다. 이 증거들은 침몰된 선체의 금속 부분의 부식 정도와 일치하여,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침몰 선체와 같은 기간 동안 바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특히 어뢰추진부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가 뚜렷하였으며, 추진모터, 조종장치 등의 부품은 북한이 수출용으로 제작한 어뢰자료집의 설계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글’로 표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과 북한밖에 없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1번’ 표식 북한군 어뢰프로펠러는 결정적 증거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었다. 5월 21일 일본을 방문하고 있던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증거는 압도적인(overwhelming) 것이었다”⁴⁾라고 표현하였다.

이밖에 버블효과로 인해 함수·함미의 밑바닥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wedge 자로 꺾인 점, 배 밑바닥에 남은 수압에 의한 버블흔적, 절단된 선체에 열 흔적이 없는 점 등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은 좌초 또는 피로파괴 등에 의한 내부폭발이 아니라,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이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는 것이었다. 사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아주 상식적인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 여론조사의 변동

그러나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동아일보의 전화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72.0%는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답변한 반면, 21.3%는 “북한 소행이라는 합조단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⁵⁾

4) 신정록, “클린턴, 北, 이제 여느때처럼 다룰 수 없다”, 『조선일보』, 2010. 5. 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2/2010052200127.html(검색일: 2014. 3. 12.).

5) 정용관, “[여론조사] 합조단 발표 신뢰 72%, 군사적 대응 반대 59%”, 『동아일보』, 2010. 5. 21, <http://news.donga.com/3/all/20100522/28519405/1>(검색일: 2014. 3. 21.)

21%라면 국민 5명 중 1명 꼴이라는 뜻이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5월24일)에 따르면, “정부의 천안함 사태 원인조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1%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였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4.4%, “신뢰하는 편이다”는 45.7%였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은 16.6%,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였다. 모름·무응답은 5.9%였다.⁶⁾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많았다. 연령별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 60세 이상층이 89.9%에 달했고 50대(84.7%) 40대(70.2%)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층이 4.8%인 반면 20대는 41.6%로 가장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신뢰하는 편이다’는 소극적 응답보다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중졸 이하층에서 86.3%로 가장 높았고, 고졸 74.0%, 대학재학 이상층은 63.8%였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반대로 중졸 이하층에서 9.4%로 가장 낮았고 대학 재학이상 층에서 30.7%로 가장 높았다. 지지정당에 따라 시각차도 있었다. 한나라당 지지자는 신뢰한다는 답변이 75.8%인 데 반해 민주당 지지자는 6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6월 행정안전부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와 중·고교생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서 성인의 75.4%, 청소년의 75.1%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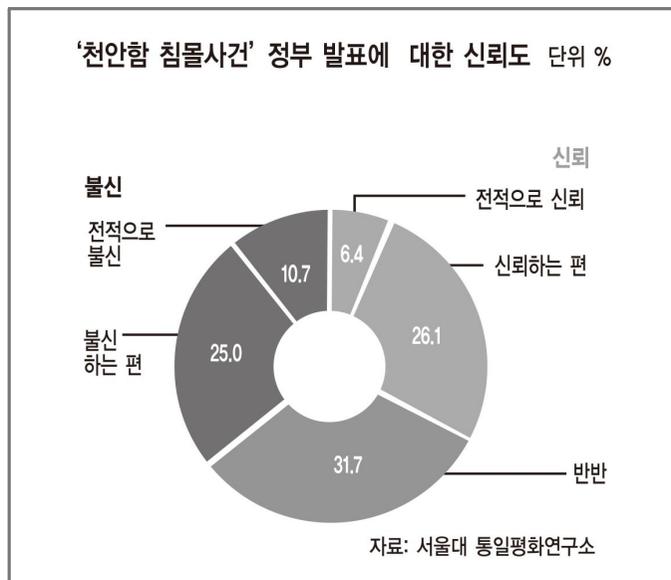
이같은 추세를 요약하면,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고, 평균적으로 20~25%가 “북한 소행을 믿지 않는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같은 추세와 달리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이 10명 중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9월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6.4%)’와 ‘신뢰하는 편(26.1%)’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0.7%)’, ‘신뢰하지 않는

6) 이동현, “천안함 정부 발표 신뢰 70%, 불신 24%” 『한국일보』, 2010. 5. 24.,
http://search.hankooki.com/search.php (검색일: 2014. 3. 22.).

편(25%)’이라고 답한 사람은 35.7%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한다는 ‘반반(31.7%)’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2010년 7월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갤럽)를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2.8%, 신뢰수준은 95%이었다.⁷⁾

이 조사결과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천안함 조사’ 불신감 확산…국민 32%만 “정부 발표 믿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차이 3.2%는 국민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도⁸⁾하였다.



〈그림 2〉 천안함 침몰사건 정부발표 신뢰도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통일의식조사』

당시 통일평화연구원 이상신 선임연구원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령·정치 성향·지역 등 다른 변수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3~4배 더 큰 영향을 미

7) 박명규 외, 「2010 통일의식조사」, pp.232-23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0), <http://tongil.snu.ac.kr/xe/sub710/12885>(검색일: 2014. 3. 13.).

8) e-뉴스부, “천안함 조사 불신감 확산…국민 32%만 “정부 발표 믿는다”, 『한겨레신문』, 2010. 9. 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8817.html (검색일: 2014. 3. 12.).

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의 실제 원인 자체보다는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서 천안함 조사결과도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⁹⁾

한겨레신문은 같은 기사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5월20일 ‘천안함은 북한 연어급 잠수함이 발사한 중어뢰 CHT-02D에 의해 격침됐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천안함에서 발견된 흡착물이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매직펜으로 쓴 ‘1번’이라는 글씨가 지워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천안함은 북한 피격이 아닌 좌초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침몰한 것이다 △천안함의 사고 시각이 정부 발표와는 다르다 △정부가 폭발 순간을 찍은 TOD 동영상을 숨기고 있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¹⁰⁾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천안함 침몰의 원인 자체보다는 ‘정부를 믿지 못하므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과,

- i) 천안함에서 발견된 흡착물이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
- ii) 매직펜으로 쓴 ‘1번’이라는 글씨가 지워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iii) 천안함은 북한 피격이 아닌 좌초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침몰한 것이다
- iv) 천안함의 사고 시각이 정부 발표와는 다르다.
- v) 정부가 폭발 순간을 찍은 TOD 동영상을 숨기고 있다는 이른바 ‘각종 의혹’들은 각종 인터넷 매체들에서 재생산되면서 이어졌다. 이후 천안함 1주기~3주기를 거치는 동안 천안함 침몰의 과학적 증거와 북한 소행이라는 팩트를 신뢰하는 70%와,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20~25%의 수치는 거의 변함없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분열현상은 논리적으로 볼 때 과학의 범주 대(對) 정부에 대한 불신(不信)의 범주이므로, 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의견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 끊임 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어 있고, 중국에 되면 “과학이라고 해서 다 믿으라는 말이나?”라는 주장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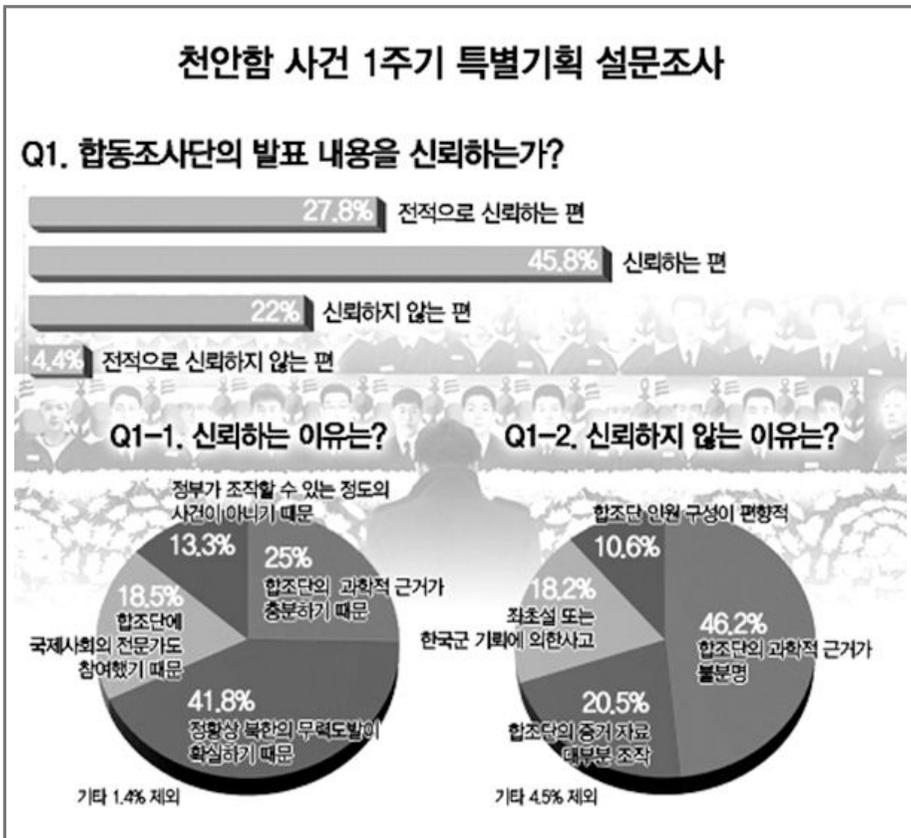
9) 박명규 외, 『2010 통일외식조사』, pp.236-238,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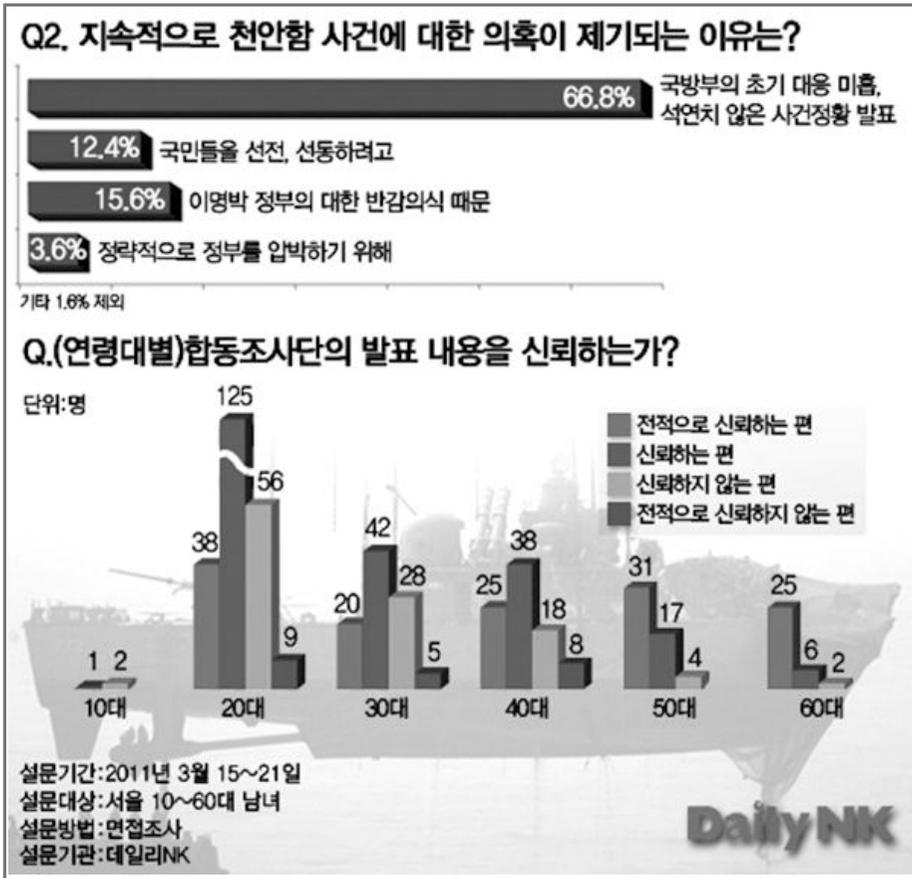
10) e-뉴스부, “천안함 조사 불신감 확산…국민 32%만 “정부 발표 믿는다”, 한겨레신문, 2010. 9. 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8817.html (검색일: 2014. 3. 12.).

3. 천안함 폭침 1주기~3주기 여론조사 및 국민의식 변화

(1) 1주기= “정부 발표 못믿는다” 26%

북한문제 전문 인터넷언론인 데일리NK가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 2011년 3월 15일~21일까지 1주일에 걸쳐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7.8%(139명)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45.8%(229명)로 ‘신뢰’ 의견이 73.6%(368명)로 조사됐다.





〈그림 3〉 천안함 사건 1주기 특별기획 설문조사

출처: 데일리NK

반면 ‘신뢰하지 않는 편’ 22%(110명),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4.4%(22명)로 응답자의 26.4%(132명)는 여전히 조사단의 발표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다.¹¹⁾(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이는 2010년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5.20)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코리아리서치)에서 응답자의 72%가 ‘북한 소행’이라고 답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11.23)이 일어난 한 달 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83.6%(디오피니언)가 ‘북한 소행’이라고 밝혔던 것에 비교해서는

11) 조종익, “국민 10명 중 3명 아직도 “천안함 결과 못 믿어”, 『데일리NK』, 2011. 3. 23.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Id=nk00500&num=89866> (검색일: 2014. 3. 13.)

10% 정도 신뢰도가 낮아진 셈이다.

조사 결과 정부 발표에 불신감이 높은 연령층은 30대, 40대, 20대 순이었다. ‘합조단의 결과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는 20대에서는 28.5%, 30대는 34.7%, 40대는 29.2%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에서는 7.6%, 60대는 6.0%에 불과해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합조단의 결과 발표를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신뢰의 이유를 묻자 ‘정황상 북한의 무력도발이 확실’(41.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인 조사결과 발표’(25.0%), ‘합동조사단에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했기 때문’(18.4%), ‘조작할 수준의 사건이 아니다’(13.3%)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반대로 합조단의 결과 발표를 불신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46.2%), ‘합조단의 증거자료 조작 가능성’(20.5%), ‘좌초 또는 한국군의 기뢰에 의한 사고’(18.2%), ‘합조단의 편향적인 인적 구성’(10.4%)이라는 순으로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천안함 의혹’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6.8%(334명)가 ‘국방부의 초기 대응 미흡, 석연치 않은 사건 정황 발표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20~30대의 71.5%가 국방부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천안함 조사 발표 과정에서 보여줬던 합조단의 일부 미숙한 대응이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 의식 때문’이라는 응답한 경우도 15.6%(78명)에 달해, 사실관계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반(反)이명박 정부 정서에 따른 대응이 많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 태세 확립’(29.2%),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18.0%) 등 대북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과 ‘6자회담을 통한 동북아 평화정착 노력’(21.2%), ‘대북강경책 철회하고 남북대화 재개’(19%) 등 남북간 관계 진전을 주문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이 양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천안함 폭침 1년이 지나 2011에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는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국민안보의식에는 진전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2011년 6월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과 청소년(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 및 변화 추세, 안보상황 인식, 안보교육 경험과 그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pm 3.1\%p$ 다.

먼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성인 76.1%, 청소년 78.7%가 '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 가능성은 높다'고 응답했다.

또한,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을 다시 할 경우 국민 대다수(성인 84.0%, 청소년 76.8%)가 군사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며, 성인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47.2%), 청소년은 '공격한 수준 만큼만 군사력 대응'(48.0%)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군사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성인 13.4%, 청소년 21.5%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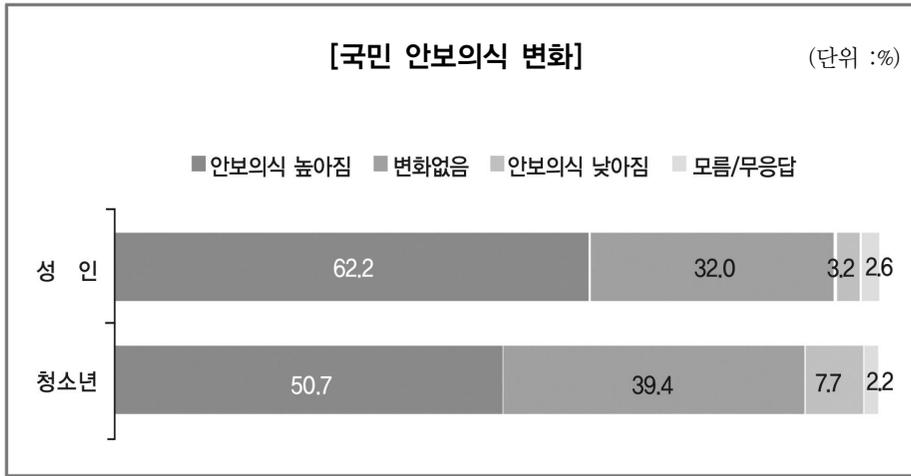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인식은 성인 59.9%, 청소년 51.4%가 '경계하고 적대할 대상'이라고 답해, 성인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청소년은 작년(41.5%)과 비교해 9.9%p 증가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성인 62.2%, 청소년 50.7%가 본인의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여, 국민 과반수 이상이 지난 1년간 안보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 성인은 55.1%가 '안보의식이 높다'고 답하였으나, 청소년은 35.8%만이 '높다'고 답해,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안보의식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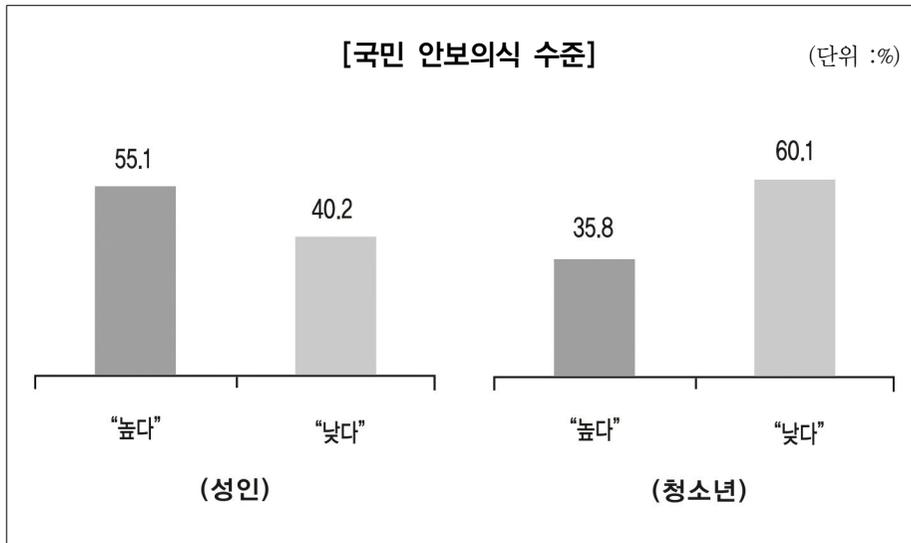
아울러,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물어본 결과 청소년 56.5%가 '안보교육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작년 조사(21.0%)와 비교해 35.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학교 안보교육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안보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73.0%는 교육이 '안보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효과적인 안보교육 방법으로는 '안보 견학과 체험'(39.1%), 영상물'(30.3%), '전문가 안보강의'(16.2%) 순으로 선호 의견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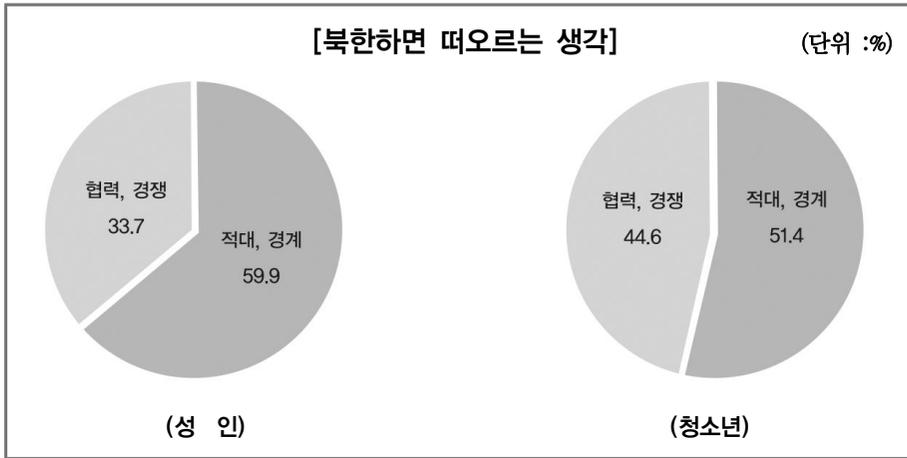
〈그림 4〉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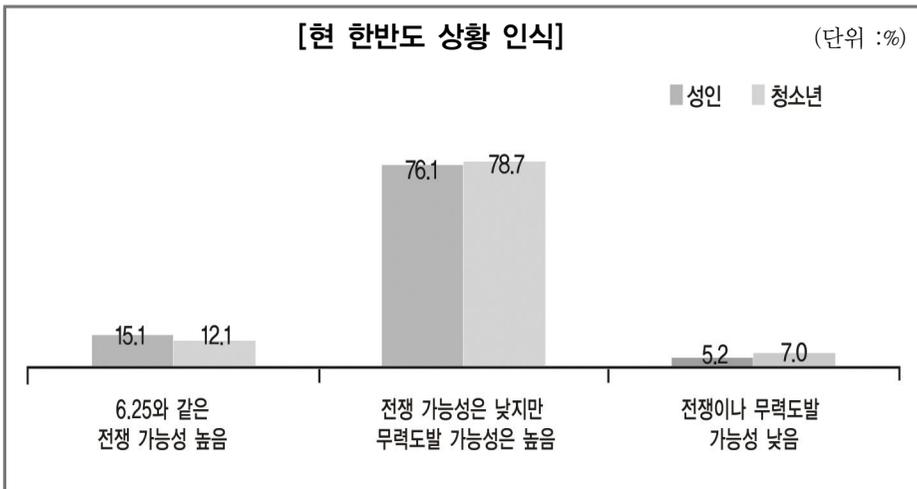
〈그림 5〉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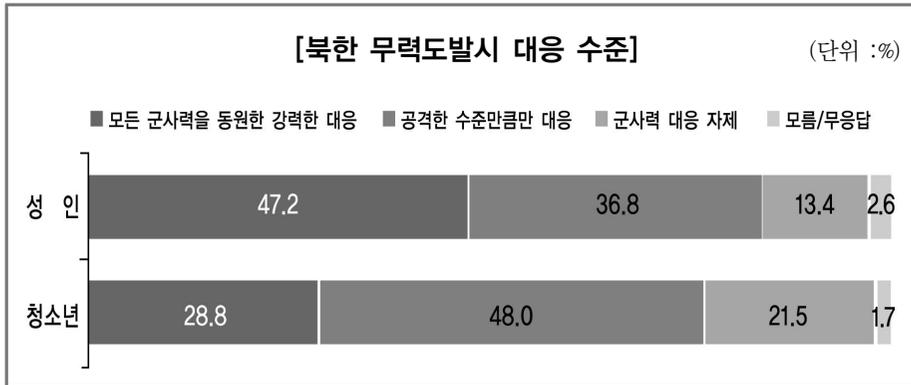
〈그림 6〉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그림 7〉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그림 8〉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3) ‘천안함 괴담’

민·군·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친북·좌파세력들 및 일부 좌(左)편향 시민단체들의 ‘의혹제기’는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의 어뢰추진체 ‘1번’은 조작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한국사회는 친북·좌파세력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이른바 ‘천안함 괴담’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해명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모습이 지속되었다. 다음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단체들이 내놓은 괴담과 국방부 등의 해명이다.

괴담① “좌초’ ‘기뢰’ ‘피로파괴’로 인한 침몰이다”

[진실]

합조단은 천안함 침몰 요인에 대해 외부폭발, 비폭발, 내부폭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러한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지를 하나씩 검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천안함 폭발원인은 ‘수중 비접촉폭발’이라는 원인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장 확실한 것은 천안함 선체의 절단면이다. 강력한 수중폭발로 연돌, 가스터빈실이 유실됐고, 군함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자형 H빔이 함저와 함께 절단돼 위로 꺾여 올라갔다. 전선은 열을 받은 흔적 없이 절단됐다.

한 두 차례의 폭발음이 들린 후 생존자 전원이 30cm~1m의 들림 현상을 겪었고, 천안함이 급격하게 우현으로 90도로 기울었다는 생존자들의 진술도 이러한 현상과 일치한다. 이후 사고현장에서 북한의 ‘CHT-02D’ 어뢰 잔해물까지 확보했다. 이 외에 충돌, 내부폭발, 기뢰 등에 의한 침몰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감응형 기뢰 등을 통해 수중에서 비접촉기뢰폭발이 발생했다거나, 종래 매설되어 있는 기뢰가 스크류에 걸린 폐그물 때문에 해저에서 수심 6~9m 지점까지 떠올라 작동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또한 근거가 없다. 천안함은 사건 당일 지그재그로 불규칙하게 1~2회 동일 지역 초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최소한 사건발생 지점 인근을 10회 이상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괴담② “미국 핵잠수함의 오폭이다”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인 점을 이유로 미 핵잠수함의 오폭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진실]

당시 한미연합훈련은 3월23일~28일까지 천안함 경비해역과 94NM(174km) 떨어진 태안반도 서방해역에서 실시했고, 사격훈련은 3월25일에 종료되었다.

괴담③ “어뢰폭발 흡착물질 조작이다”

어뢰 폭발 결과물인 흡착물질(비결정질 알루미늄)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버지니아대학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와 존스홉킨스 국제정치학과 서재정 교수의 주장이다. 서재정 교수는 2010년 7월 10일 ‘천안함 보고서의 불일치’라는 제목의 일본 외국특파원협회(FCCJ) 기자회견에서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합조단의) 데이터가 조작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현재 발표

로는 어뢰가 천안함의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폭발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선체 및 어뢰 추진체, 수중 폭발 실험에서 나온 세 가지 흡착 물질이 불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알루미늄을 1100°C에서 40분 가량 가열 후 2초 이내에 냉각시킨 결정질 산화알루미늄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EDS(에너지분광기)분석에서 원자 상태로 관찰되는 알루미늄이 XRD(X선회절기)분석에서는 그 흔적을 보이지 않는 것은 기존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 최초로 발견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진실]

합동조사단은 이 교수의 실험은 합조단이 실제 상황에 가깝게 재현한 조건과 상이하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3000°C 이상의 고온과 20만 기압 이상의 고압, 수십만 분의 1초 냉각 등 실제 폭발상황과 동일하게 실험했을 시 천안함과 어뢰추진동력장치에 묻은 흡착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흡착물이 부식에 의한 녹인 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흡착물질이 부식돼 발생한 녹이라면 부식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지만 5개월 정도 지나 확인한 결과 빗물 등에 씻겨 흡착물이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장으로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의 양판석 박사는 바닷물에 포함된 알루미늄이 천안함의 연료가 바닷물과 접촉하여 생긴 황산과 반응하여 생성된 침전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덕용 조사단장은 “사고해역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조각들이 있었다. 어뢰의 껍데기가 알루미늄이고 그 조각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알루미늄 조각을 열심히 수집해서 분석을 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 조각들이 똑같이 바다 속에 있었는데 부식이 안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알루미늄이 물속에 있었던 2개월 동안은 산소가 알루미늄 내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괴담④ “폭발한 어뢰 1번 글씨가 지나치게 또렷하다”

어뢰추진동력장치 내부에 쓰여진 ‘1번’ 글씨가 발견되자 어떻게 3000°C 폭발 열에도 불구하고 1번 잉크가 그대로 남아 있느냐는 주장이다.

[진실]

북한의 ‘CHT-02D’ 어뢰의 제원을 보아야 한다. 이 어뢰는 직경 21인치(53.4cm)로 길이는 7.35m, 무게는 약 1,700kg, 항속거리는 10~15km이다. 또 어뢰 몸통의 구성을 머리부분부터 꼬리부분까지 살펴보면, 표적탐지부(70cm), 탄두부(72cm), 전지부(4.125m), 추진동력장치부(1.805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발은 탄두부에서 일어나며 1번 글씨가 쓰여진 곳은 맨 꼬리 부분인 추진동력장치 안쪽이다. 즉 폭발지점과 1번 글씨의 거리는 5.47m이다.

폭약 250kg이 폭발시 가스버블은 6m 내외로 가스버블이 팽창하면서 추진동력장치부가 후방으로 30~40m 이동하므로, 폭발시 고열이 추진후부에 그대로 전달될 수는 없다. 또 글씨가 5cm 두께의 철재 디스크 뒷면에 쓰여 있다는 점, 또 물체가 공기중이 아닌 섭씨 3°C의 바닷물에 잠겨 있다는 점도 1번 글씨가 타지 않고 그대로 남겨진 이유다.

카이스트 송태호 교수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수중에서 폭발시 300°C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지만 버블이 단열팽창하면서 주위의 물을 밀어내고, 저온·저압으로 변하여 폭발 0.0071초 경과 시에는 버블 내 온도가 604°, 0.1초 경과되면 상온인 28°까지 버블 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짐으로 1번 글씨가 쓰여 있는 디스크 후면은 바닷물의 수온 3°에서 단 1°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아 당연히 1번 글씨는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어뢰가 폭발 후에도 뒤로 밀려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전달됐을 온도보다 높은 1200°C로 1번을 직접 가열하는 실험을 진행해 1번이 타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송 교수는 3000°C로 직접 때려도 그 짧은 접촉으로는 1번 글씨의 온도가 탈 정도로 상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열 전도의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괴담⑤ “폭발은 좌현, 스크류는 우현이 변형. 앞뒤가 안맞다”

스크류 변형에 대해 한 좌파매체는 알파잠수기술공사 이모 대표를 30년 경력의 인양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스크류 날개에 보면 스크래치가 있는데, 스크류 변형은 해저면의 단단한 모래에 스크류가 닿아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년 경력의 금속전문가라는 사람도 사진으로 천안함 스크류 변형 상태를 확인한 후 “스크류가 무언가에 닿아서 휘어지고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뿔가에 걸려서 빠져 나오려고 하다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진실]

비접촉 수중폭발로 증명된 이상, 스크류의 변형은 불필요한 문제 제기에 속한다. 스크류가 급정지하면서 관성력에 의해 일정한 모양으로 휨 것이라는 스크류 제작회사인 스웨덴 가메와 사의 설명이 있었다. 충남대 노인식 교수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같은 변형이 나올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단순히 스크류 회전이 급정지할 경우는 변형이 있긴 했지만 미약한 수준이었다. 대신 사건 당시 천안함 추진축에 연결된 기어박스 하부의 충격에 의한 감속기어 손상으로 추진축이 10cm가량 밀림 현상이 나타나는 조건을 추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천안함과 같은 변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노 교수는 설명했다.

폭발이 좌현 쪽에서 발생했음에도 우현 스크류가 더 손상된 것은 우현 스크류가 짧은 시간에 추진축의 밀림과 동시에 급작스런 정지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스크류 날개 5개가 앞쪽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변형되었으나 좌현 축은 정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관성력이 작용함으로써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4) ‘연평도 포격도발’로 20대 안보의식 상승

2011년 3월31일 동아일보 창간 91주년 여론조사 결과,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76.9%, ‘북한 소행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16.4%였다.¹²⁾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 직후인 5월 20, 21일 동아일보 조사에서 ‘북한 소행이 맞다’고 했던 답변은 72.0%, ‘합조단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은 21.3%였다. 1년 동안 ‘북한 소행’ 응답은 4.9% 상승한 반면, ‘신뢰할 수 없다’는 5% 정도 하락하였다. 1년 동안 약 5% 정도가 ‘진실’쪽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는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후 8개월 정도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천안함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20대 이하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2010년 5월 조사 때 20대 이하에서는 ‘합조단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47.8%로 합조단 발표를 믿는 응답(42.6%)보다 높았다. 2011년 조사에서는 20대 이하의 응답자 중 67.7%가 ‘북한 소행이다’, 27.8%는 ‘북한 소행 아니다’라고 답해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을 것이란 답

12) 류원식, “20대 68% “천안함 北 소행”... 10개월새 25%P↑” 『동아일보』, 2011. 3. 31.
<http://news.donga.com/3/all/20110331/36027152/1> (검색일 2014. 3.13.).

변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북한이 우리나라의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이 57.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5.3%)보다 훨씬 많았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 7개 대학생 단체들은 2011년 3월 ‘천안함 피격 1주기 대학생 추모주간’ 선포식을 가졌다. 추모위는 3월 12일 50여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평택 2함대 해군기지를 방문하는 등 추모주일을 갖고 대학생 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521명 중 81.3%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의 안보수준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이 상존하며 매우 위험한 상태다(64.3%)’라고 평가하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17.5%)’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높다(61.0%)’ 혹은 ‘매우 높다(26.5%)’고 바라보는 의견이 87.5%에 달한 반면 ‘낮다’(1.7%)와 ‘매우 낮다(0%)’의 응답률은 약 2%에 그쳤다.

향후 북한의 군사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46.7%)’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무력 증강을 통한 군사적 압박은 필요하지만 직접적 교전은 피한다(28.2%)’, ‘북한과 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12.9%)’, ‘국제사회에 북한을 고발하고 외교적 공조를 통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10.9%)’순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방식

- 설문참여인원: 서울지역 및 서울 외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521명
- 설문조사 기관: 미래 지성을 위한 시사 교양지 <바이트>(기자 및 인턴기자 포함 20명의 인원이 설문조사 진행)
- 설문조사 방식: 무작위 1:1 면접조사 (학생식당, 학교 근처 카페 등의 무작위 방문)
- 설문조사 일시와 장소: 2011년 3월 1일 ~ 3월 8일
(경희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서울 소재 대학교 일대 및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5.5% 포인트

이밖에 2011년 3월31일 통일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3월 26~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 및 대북문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천명 중 69.4%가 반대, 27.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74.5%, 우리나라 군사안보 상황이 위험하다는 의견은 71.8%로 다수의 국민들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및 대북인식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0.8%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답했으며 75.4%의 응답자가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안보불안 해소(26.7%), 선진국이 되기 위해(14.9%), 북한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11.7%), 이산가족 재회(3.4%)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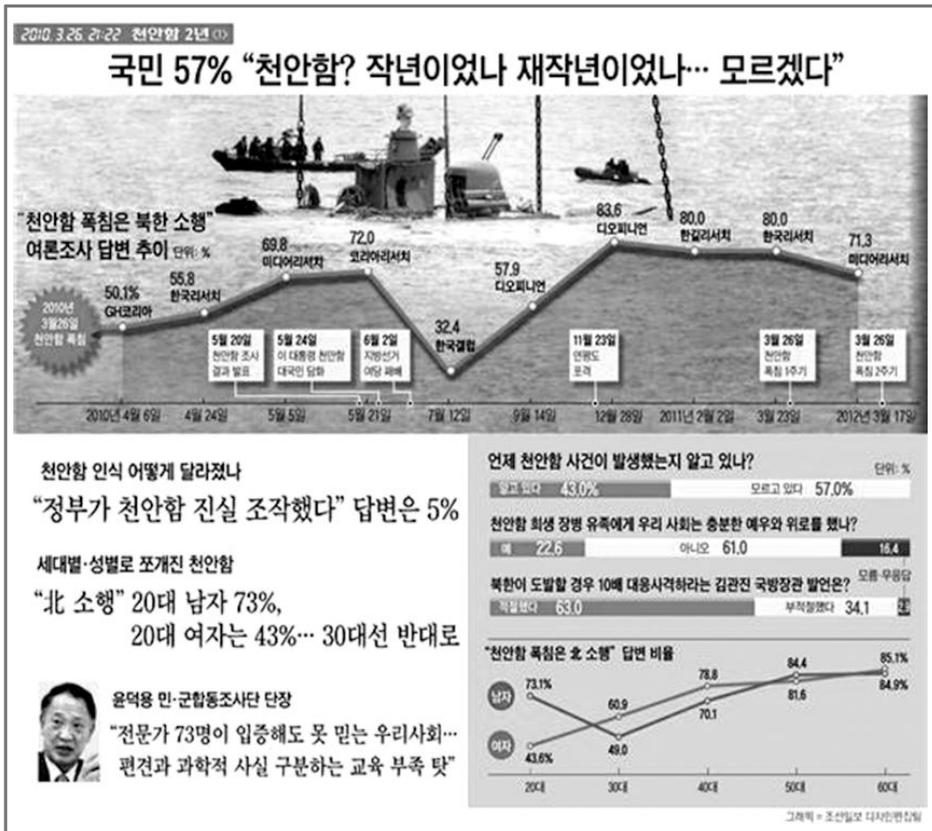
(5) 천안함 2주기 여론조사 및 국민의식 변화

2012년 3월 천안함 폭침 2주기를 맞아 실시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국민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천안함 폭침이 2년 전에 발생한 것을 아는 국민은 43.0%였고 57.0%는 모르고 있었다.¹³⁾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2010년 3월 사건 직후엔 50%대였다가 점차 상승해 70%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나타나듯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구호가 이슈가 되면서 32.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엔 ‘북한 소행’을 믿는 여론이 80%까지 상승했다. 2011년 한해동안 70%~80%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 2주기 조사에선 71.3%로 다소 하락했다. 북한 소행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21.9%였고, ‘모름·무응답’은 6.8%였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란 것을 믿지 못하는 응답자들에게 “천안함 사

13) 홍영림, “국민 57% 천안함?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모르겠다”, 조선일보, 2012. 3. 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19/2012031900235.html(검색일: 2014. 3. 13.).



〈그림 9〉 천안함 2년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국민인식 조사

출처: 조선일보(2012. 3. 20.)

건과 관련해 정부가 진실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유포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결과에선 ‘사건 초기에 정부와 군 발표가 오락가락해서’가 6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진실을 조작해서’ 23.7%, ‘천안함은 날조극이란 북한 주장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4.7%, ‘야당에서 정부를 불신하는 주장을 계속 해서’ 2.9%의 순이었다. 이 중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란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정부가 천안함 관련 진실을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것을 믿지 않는 응답자들은 침몰 원인으로 ‘암초 충돌’ 22.3%, ‘미군 오폭’ 18.4%, ‘유실 기뢰 폭발’ 18.2%, ‘군함 노후화로 인한 피로 파괴’ 16.1% 등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천안함

희생 장병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가 부족했다'는 질문에 61.0%가 “공감한다”고 했다.

2012년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세대별 여론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10년 5월 정부 발표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이번 결과를 비교하면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란 응답은 전체적으로 69.8%와 71.3%로 비슷했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20대(60.0→58.9%)와 30대(58.9→54.9%)에선 하락한 반면, 40대(71.8→74.3%)와 50대(81.7→83.0%), 60대 이상(78.1→85.0%)에선 상승했다.

이에 대해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천안함 관련 음모론이 많이 유포됐던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더 많이 노출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¹⁴⁾

한편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다른 대북지원과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은 재개해야 한다’가 55.7%,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24.9%,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 16.8%였다.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10배까지라도 대응사격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적절했다’ 63.0%, ‘부적절했다’ 34.1%였다.

(6) 2012년 안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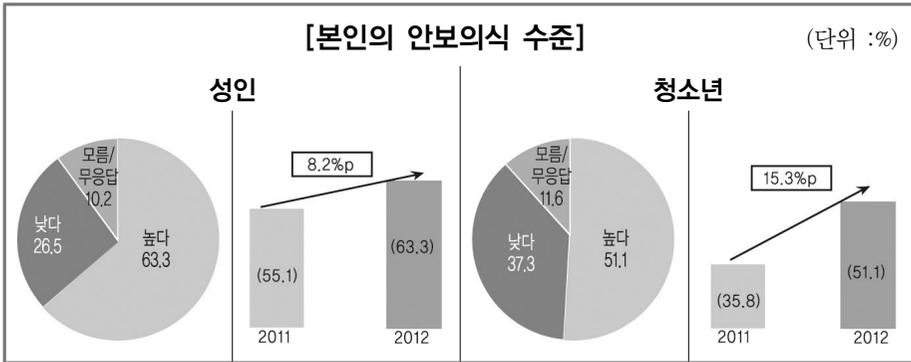
안행부의 국민안보의식 조사에서 ‘천안함을 누가 공격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은 사건발생 당해 연도인 2010년에만 들어가고 2011년부터는 제외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안보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012년 안행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결과 및 분석내용이다.

① 국민안보의식

-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 할 때 안보의식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이는 최근 김정은 체제 출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짐.

14) 홍영림, “국민 57% 천안함?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모르겠다”, 조선일보, 2012. 3. 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19/2012031900235.html (검색일: 2014. 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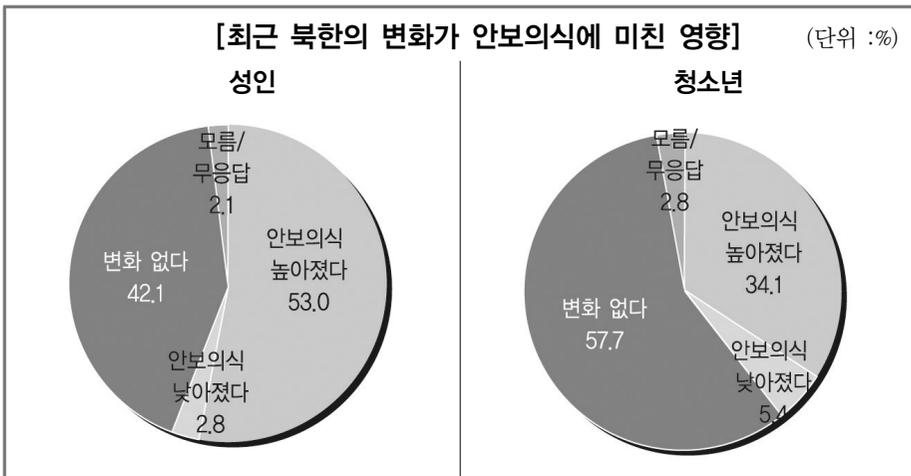
- 성인의 63.3%, 청소년 51.1%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1년 성인 55.1%, 청소년 35.8%에 비해 각각 8.2%p, 15.3%p 증가하였음.



〈그림 10〉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 최근 북한의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 출범, 장거리 미사일발사, 대남무력도발 예고 발언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성인의 53.0%, 청소년 34.1%가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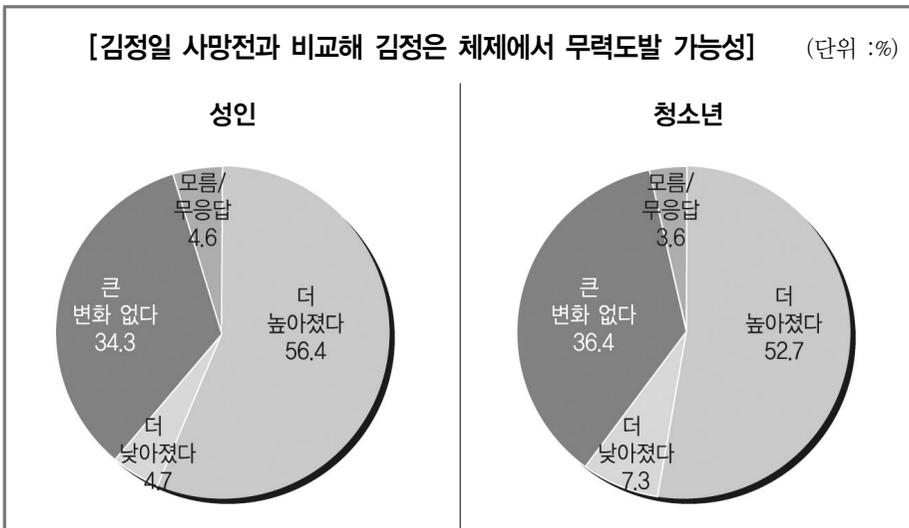


〈그림 11〉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② 김정은 체제 관련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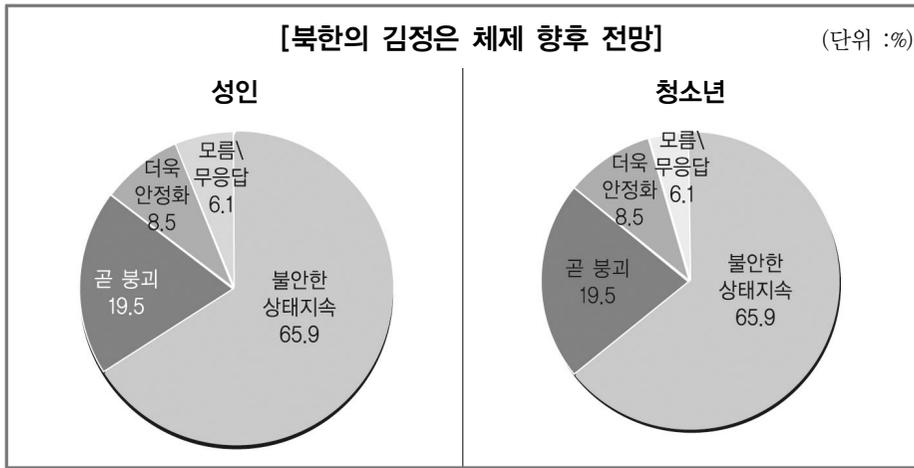
- 김정일 사망전과 비교할 때 김정은 체제에서 성인과 청소년 과반수가 김정은 체제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며, 최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성인과 청소년 모두 과반수가(각각 56.4%, 52.7%) 김정일 사망 전과 비교해 김정은 체제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더 낮아졌다는 응답은 성인 4.7%, 청소년 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12〉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 또한 북한이 최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성인과 청소년 모두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각각 75.0%, 68.7%)
- 김정일 사망 전과 비교할 때 김정은 체제에서 개혁개방 가능성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큰 변화가 없다 (각각 41.6%, 51.1%)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높았음(각각 65.9%,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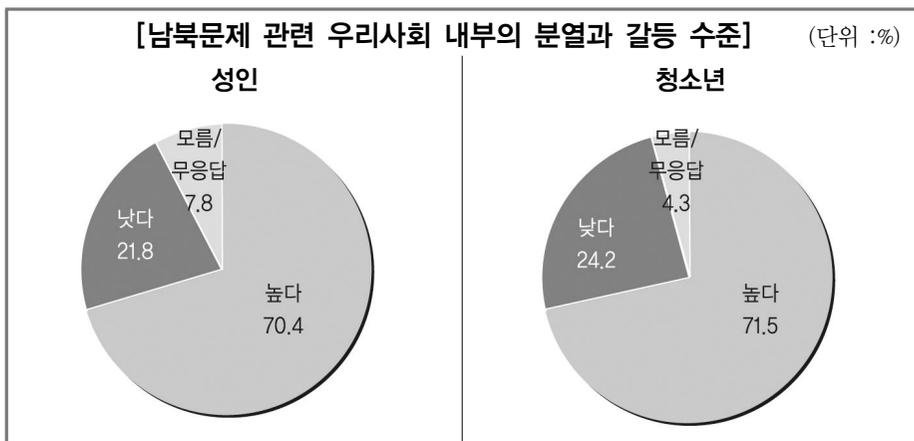


〈그림 13〉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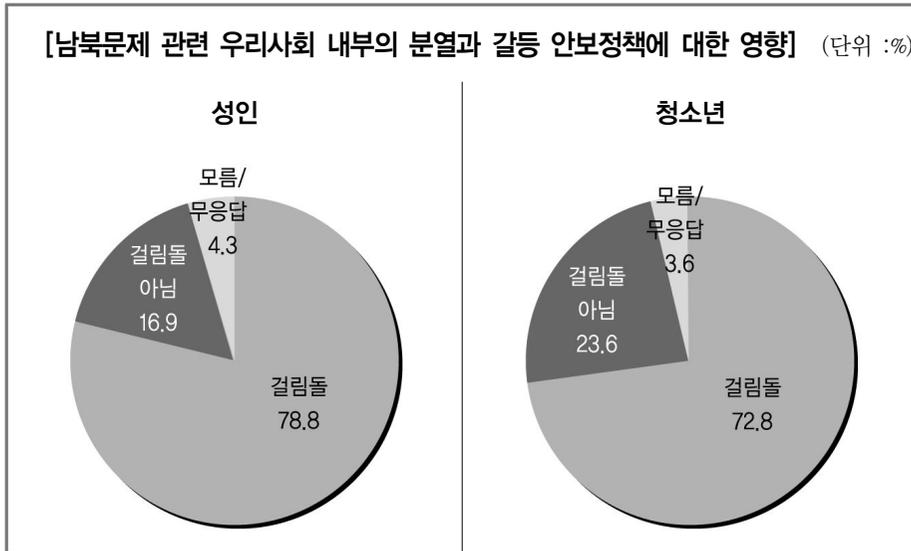
③ 남북문제 관련 우리사회 내부 분열과 갈등

- 성인 70.4%, 청소년 71.4%가 남북문제와 관련된 우리사회 분열과 갈등이 높다고 응답함.
- 이와 관련하여 성인 78.8, 청소년 72.8%는 그러한 분열과 갈등이 우리의 안보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를 표명함.



〈그림 14〉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그림 15〉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7) 천안함 3주기 여론조사= 69.2% “북한 소행”

2013년 천안함 3주기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3월 27일~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소행이라는 추정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선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소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69.2%로 지난 2010년 9월 조사결과(57.2%)보다 12.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초나 충돌에 의한 침몰이라는 의견은 15.5%로 지난 조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82.3%가 북한 소행 의견(좌초, 충돌 5.0%)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50대가 72.9%(좌초, 충돌 9.1%)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40대가 67.4%, 20대가 64.4%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에는 북한소행 의견이 58.7%, 좌초, 충돌 의견이 29.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소행 의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8.0%가 북한소행 의견(좌초, 충돌 4.1%)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도 과반인 56.0%가 북한소행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층은 60.0%가 좌초, 충돌 이라는 의견을 나타내, 북한소행 의견(33.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3월 20일 주요 방송사와 은행에 발생한 해킹관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9%가 북한 소행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전문해커 집단소행이라는 의견은 22.2%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67.4%로 북한소행 의견이 가장 높았고, 50대 역시 65.6%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30대가 49.3%, 20대가 42.5% 순으로 나타났고, 40대 역시 북한소행 의견이 40.0%로 전문해커 집단소행 의견(29.8%)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Ⅲ. 결론: 세 가지 특징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2010년 3월 사건 직후엔 50%대였다가 점차 상승해 70%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가 이슈가 되면서 32.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소행’을 믿는 여론이 80%까지 상승하였다.

천안함 1주기인 2011년 한해 동안 70%~80%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 2주기 조사에선 71.3%로 다소 하락했다. 북한 소행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21.9%였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란 것을 믿지 못하는 응답자들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진실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유포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에 정부와 군 발표가 오락가락해서’가 64.9%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정부가 진실을 조작해서’ 23.7%, ‘천안함은 날조극이란 북한 주장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4.7%, ‘야당에서 정부를 불신하는 주장을 계속 해서’ 2.9%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82.3%가 북한 소행 의견(좌초, 충돌 5.0%)을 나

타내 가장 높았고, 50대가 72.9%(좌초, 충돌 9.1%)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40대가 67.4%, 20대가 64.4%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에는 북한소행 의견이 58.7%, 좌초, 충돌 의견이 29.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소행 의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8.0%가 북한소행 의견(좌초, 충돌 4.1%)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도 과반인 56.0%가 북한소행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층은 60.0%가 좌초, 충돌 이라는 의견을 나타내, 북한소행 의견(3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주요 특징을 압축하면, i) ‘북한소행을 믿지 않는다’가 20%대를 항상 유지한다 ii) 특히 30대가 북한소행을 믿지 않는다 iii) 통합진보당의 60%는 북한 소행을 믿지 않는다고 압축할 수 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 추이는 크게 4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징①=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북한 소행이다’라는 응답이 평균 70%선, ‘북한 소행 아니다’는 응답이 평균 20%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북한 소행 아니다’라고 응답한 20% 중 10% 정도는 ‘천안함 폭침 원인’이라는 순수 사실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가진 응답자로 추정된다. 실제로 ‘합동조사단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자 중에서 ‘믿지 않는 이유’ 대해 “사건 초기에 정부와 군 발표가 오락가락해서”가 64.9%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10% 정도는 반(反)대한민국·반미친북 경향성을 가진 세력으로 추정된다(=전 국민의 10%라는 뜻이 아니라, ‘북한 소행 아니다’ 응답자 중 10% 정도).

특징②= 연령·세대·학력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1주기를 거친 2011년부터 20대에서는 ‘북한 소행’이라는 응답이 10% 정도 높아진 반면, 30대~40대에서는 여전히 합조단 발표를 믿지 않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징③=지지 정당별 정치성향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80% 이상, 민주당 지지는 65% 정도가 ‘북한 소행’이라고 응답한 반

면, 통합진보당 지지자는 ‘북한 소행 아니다’라는 응답자가 60% 정도를 차지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사회에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가 바로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 지지 성향에 따라 ‘천안함 폭침 원인’이라는 과학 영역에서의 사실관계가 왔다갔다 한다는 점이다. 과학은 과학이고, 정치적 지지성향과는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혼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실관계 판단에서 과학주의 · 합리주의 · 이성(理性)주의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객관적 판단’과 ‘개인적 견해’ 사이에 혼선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문화가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징 ④ 친북 인터넷 매체와 SNS에서 나도는 ‘천안함 괴담’과 사실 왜곡 및 선전선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함 폭침 후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악용한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정치 선동이 먹혀 들어가면서, 실제로 7월 여론조사를 보면 ‘합동조사단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2.4%까지 추락하는 이변이 일어났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IV. 대책

대책①= 북한에 의한 도발은 정부가 사건 초기에 정확히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불과 1시간 30분 정도만에 “북한과 관련성 낮다”고 성급히 발표한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었다. 이후에도 잇따른 오락가락 발표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정부는 사건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발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책②= 가정교육 · 학교교육 · 사회교육에서 사실관계(fact) 및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주의 · 합리주의 · 이성주의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교육이 선행되어야 거짓말, 왜곡날조, 선전

선동에 대한 정신적 항체가 생기며,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않게 된다.

대책③= 중고교 학교교육에서 ‘바른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중고교 사회 교재를 보면 ‘낮은 수준의 정치학 개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보다는 실제적인 ‘정치 교육’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모의국회 등을 통해 입법 활동, 사회 갈등 조정,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판단하는 문제 등을 배우는 ‘정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적인 토론과 합의 창출 등의 사회적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또 중고교에 철학수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철학수업도 어려운 철학사의 철학이론보다는 ‘바르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 ‘개인과 국가공동체의 관계’ 등에 관해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대책④= 북한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전체주의 수령독재 체제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우리민족끼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바른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언론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다.

대책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체력이 튼튼해져야 한다. 부정부패·특권이 횡행하고 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반대한국·친북 경향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보수 주류세력의 자기희생적인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은 중북친북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기초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대책⑥=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진정한 한반도 비핵·평화의 완결이며,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참고문헌

- 류원식. “20대 68% “천안함 北 소행”… 10개월새 25%P↑” 『동아일보』, 2011년 3월 31일, <http://news.donga.com/3/all/20110331/36027152/1> (검색일 2014. 3. 13.).
- 박명규 외. 『2010 통일외식조사』. pp.232-23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0), <http://tongil.snu.ac.kr/xe/sub710/12885> (검색일: 2014. 3. 13.).
- 신정록. “클린턴, 北, 이젠 여느때처럼 다룰 수 없다”, 『조선일보』, 2010년 5월 22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2/2010052200127.html(검색일: 2014. 3. 12.).
-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2011).
 ————. 『2012년 국민안보의식 조사』(2012).
- 이동현. “천안함 정부 발표 신뢰 70%, 불신 24%” 『한국일보』, 2010년 5월 24일, <http://search.hankooki.com/search.php> (검색일: 2014. 3. 22.).
- 이석호. “천안함, 정부 조사 믿는다 10명 중 3명”, 『조선일보』, 2010년 9월 8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8/2010090800161.html(검색일: 2014. 3. 13.).
- 이재교. 「천안함 폭침사건과 거짓 루머」, 『시대정신』 2010년 가을호,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1003&num=418>(검색일 2014. 3. 12.).
- 정용관. “[여론조사] 합조단 발표 신뢰 72%, 군사적 대응 반대 59%”, 『동아일보』, 2010년 5월 21일, <http://news.donga.com/3/all/20100522/28519405/1>(검색일: 2014. 3. 21.)
- 조종익. “국민 10명 중 3명 아직도 “천안함 결과 못 믿어”, 『데일리NK』, 2011. 3. 23.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500&num=89866> (검색일: 2014. 3. 13.)
- 홍영립. “국민 57% 천안함?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조선일보, 2012월 3월 2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19/2012031900235.html (검색일: 2014. 3. 13.).
- e-뉴스부. “천안함 조사 불신감 확산…국민 32%만 “정부 발표 믿는다”, 『한겨레신문』, 2010년 9월8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8817.html 검색일: 2014. 3. 12.).

Abstract

Cheonan Frigate Incident and Yeonpyeongdo Shelling by North Korea: Changing Public Opinion; Strategic Consideration

Sohn Kwang-Joo*

During the four years follow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frigate in 2010,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has seen changes in four basic ways.

First, public polls with respect to the cause of the sinking show that 70% of the people consider North Korea as the culprit, while 20% maintain that it was not an act carried out by North Korea.

Second, the opinions relative to the cause of the incident seem to vary according to age difference, generational difference, and educational difference. From 2011, people in their 20s showed 10% increase in regarding North Korea as the responsible party. People in their 30s and 40s still have a tendency not to believe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combined military and civilian group.

Third, the most prominent issue that arose aftermath of the Cheonan incident is the fact that political inclination and policy preference are influencing the scientific determination of the cause. In other words, scientific and logical approach is lack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ctual basis for the cause. This process is compromised by the inability of the parties concerned in sorting out what is objective and what is personal opinion. This confused state of affairs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n a healthy, productive debate.

* Chairman, Korea Unification Strategy Institute.

Fourth, rumors,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generated by pro-North Korea Labor Party groups in the internet and SNS are causing considerable impact in forming the public opinion.

Proposed Strategy

1. The administration can ascertain public trust by accurately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provocation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cident.
2. Education in scientific, logical, rational methodology is needed at home, school, and workplace in order to enhance the people's ability to seek factual truths.
3. In secondary education, the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must be reinforced.
4. It is necessary for the educational system to teach the facts of North Korea just as they are.
5. Fundamental strength of free democratic system must be reinforced. The conservative, mainstream powers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lf-sacrifice and societal duties.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must sever themselves from those groups that take instructions from North Korea's Labor Party. The progressives must pursue values that are based on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all.
6. Korean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is the genuine means to achieve peace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must recognize that this unification initiative is the beginning of th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Far East Asia, and must actively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Key words: Cheonan Frigate Incident, South Korean changing public opinion, Strategic Consideration.